

경 제 법

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으로서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다.
-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정한 과징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판결을 한다.
- ⑤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결 및 공시 과정에서 주요내용을 누락한 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관련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련시장이 넓게 확정될수록 사업자가 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질 가능성은 낮아진다.
- ② 시장지배적지위와 관련하여 관련상품시장은 시장지배력 행사를 억제하여 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한다.
- ③ 기업결합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다.
- ④ 분양가 담합과 관련하여 신규분양 아파트와 기존아파트는 하나의 관련시장에 포함된다.
- ⑤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타이어용 카본블랙과 산업고무용 카본블랙은 하나의 관련시장에 포함된다.

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한다.
- ㄴ.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ㄷ. 사업자가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ㄹ. 부당한 고객유인의 경우 실제로 고객이 유인되었는지 여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4. 유통사업자들로 구성된 연합회의 다음 행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구성사업자들에게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다른 구성사업자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② 구성사업자들에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 타지역으로 영업범위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③ 구성사업자들에게 연합회와 업무 제휴되어있는 물류회사와만 운송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
- ④ 구성사업자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 ⑤ 구성사업자들에게 사실이 아님에도 ‘대한민국 유통대상 수상’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행위

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공급자들이 아닌 수요자들의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 ㄴ.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 ㄷ.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합의가 수 회 반복되었다면 동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개별적 합의가 수 개 존재한다고 본다.
- ㄹ.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ㄱ, ㄹ ④ ㄴ, ㄷ
- ⑤ ㄷ, ㄹ

문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추정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 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5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ㄷ.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이며, 2위 회사와의 시장점유율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으로 추정한다.
- ㄹ. 대규모회사가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당해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점유율만 가지게 되어도 경쟁제한성을 추정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 ③ ㄴ, ㄷ ④ ㄴ, ㄹ
- ⑤ ㄷ, ㄹ

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탁매매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가격을 지정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 ② 가격측면에서의 수직적 거래제한이다.
- ③ 경쟁자의 판촉활동을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동기에서 행해질 수 있다.
- ④ 권장소비자가격이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없을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경쟁촉진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

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중 ‘정당한 이유없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외형상 이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ㄴ. 경영상 또는 거래상 필요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ㄷ. 입증책임에 있어서 ‘부당하게’와 차이가 없다.
 ㄹ. 공동의 거래거절은 이 행위유형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문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규모회사가 임원겸임을 하는 경우 사전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주식취득의 경우 주식취득의 계약합의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들 사이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⑤ 신고의무자가 2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문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끼워팔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은 별개의 상품이어야 한다.
- ② 거래강제행위의 한 유형이다.
- ③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된다.
- ④ 프린터에 잉크를 끼워파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수 있다.
- ⑤ 대형마트에서 콜라와 사이다를 묶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

문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지주회사가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가 설립된 날부터 2년간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 ②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지주회사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문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를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동의를결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진행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동의를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동의를결을 하지 않는다.
- ④ 사업자가 동의를결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동의를결은 시정조치와 마찬가지로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진신고자가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이어야 한다.
- ②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③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여 수 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 ④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만이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문 14.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의 직접성과 계속성이 요구된다.
-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이 밝혀지면 다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15. 「소비자기본법」상 자율적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저작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관장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없다.
 ㄷ. 분쟁당사자가 자율적 분쟁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ㄹ. 분쟁당사자가 자율적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한 경우 그 분쟁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에 속한 다단계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어야 한다.
 ④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문 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소비자는 계약서면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여야 한다.
 ③ 청약이 철회된 경우 소비자의 재화반환의무와 통신판매업자의 대금환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거래당사자가 철회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약정한 경우라도 소비자는 법정 기간 내에 철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 외에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청약철회의 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문 1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농가로부터 김장용 배추 200포기를 구매하면서 구매 대금을 3개월 동안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 계약
 ②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6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 계약
 ③ 냉장고 구매 대금을 신용카드로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냉장고는 계약체결 즉시 인도받기로 한 계약

- ④ 컴퓨터 구매 대금을 2개월 내에 3회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컴퓨터는 대금완납 후 인도받기로 한 계약
 ⑤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분양 대금은 6개월 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계약

문 1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부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한 후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 할부거래업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에서 남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문 2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
 ②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직접 마련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

문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이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한 것을 말한다.
 ② 약관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다.
 ③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약관의 명시 및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④ 불공정약관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⑤ 사업자의 고의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 약관에 의한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

문 2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청약철회 규정
- ② 형사처벌 규정
- ③ 포상금 지급 규정
- ④ 계약서 발급의무 규정
- ⑤ 과징금 규정

문 2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목욕탕에 게시된 “손님이 맡기지 않은 물건의 도난,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유일조항
- ② 공공사업자의 전기·가스 공급규정
- ③ 이동통신서비스 거래약정서
- ④ 편의점 가맹계약서
- ⑤ 상가를 특정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서

문 2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과 달리 약정한 경우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 ②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명시적외에 교부의무도 부담한다.
- ③ 고객의 대리인에게 설명하였다면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 ④ 사업자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고객과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약관을 게시하면 원칙적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 ⑤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상법의 취소기간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이 법에 근거하여 위 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문 25. 「소비자기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사업자에 대한 형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②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권한은 한국소비자원에게 있다.
- ③ 물품을 소비생활이 아닌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 ④ 사업자는 시험·검사 시설의 설치의무를 부담한다.
- ⑤ 소비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법 철 학

문 1. 플라톤(Platon)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수가 통치하는 민주정체를 선호하였다.
- ② 참된 지식은 법률과 명령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 ③ 당시의 아테네 배심재판보다 경험 많고 분별 있는 재판관에 의한 재판을 지지하였다.
- ④ 정의는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 신이 좋아하는 것이지, 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⑤ 후기 저서 『법률』에서 통치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시민의 무조건적 복종행위를 비판하였다.

문 2.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 행복은 덕(arête)을 행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국가의 통치계급은 중용의 덕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③ 사물을 이해하는 데 목적론적 사고를 중시하였다.
- ④ 시민의 공적 활동을 위해 노예제도를 옹호하였다.
- ⑤ 국가의 목적은 시민의 윤리적 덕성을 함양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문 3. 아퀴나스(T. Aquinas)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의 악행과 죄악은 무지가 아니라 의지의 자유로운 결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 ② 법은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의 질서라고 보았다.
- ③ 자연법은 이성을 통한 본성의 실현을 명하는 것이고, 실정법은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④ 법은 규칙과 저울이기 때문에, 의지의 결정이 아니라 지성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 ⑤ 신법(神法)에 어긋나는 인정법(人定法)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문 4. 법사상가와 그의 주장이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 인간은 완전한 경우에는 동물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만, 법과 정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악의 존재이다.
- ② 키케로(Cicero) - 인정법(人定法)은 “타인을 해치지 말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라.”는 원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③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 지상의 국가는 인간의 원죄에서 파생된 필요악이다.
- ④ 몽테스키외(Montesquieu) -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법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이다.
- ⑤ 오스틴(J. Austin) - 법학의 대상은 ‘있는 법’이 아니라 ‘있어야 할 법’이다.

문 5. 오킴(W. Ockham)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구법(永久法)을 거부한 스코투스(D. Scotus)의 주의주의(主意主義)를 극한적인 형태로 발전시켰다.
- ② 신은 절도와 같은 악행도 명할 수 있으며, 만일 신이 그렇게 의욕한다면 그 행동은 선하다고 주장하였다.
- ③ 실정법은 인간의 제정과 창조를 통해 확립된다고 보았다.
- ④ 정당한 입법자에 독립해서 본질적으로 정당한 법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 ⑤ 신법(神法)에 모순되는 국가법은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문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공자(孔子)는 신뢰가 국가존립의 근본이므로, 백성을 법으로 다스리고 형벌로 계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ㄴ. 상앙(商鞅)은 변법(變法)을 강조하고 군주에게 입법권을 집중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 ㄷ. 한비자(韓非子)는 상과 벌을 법과 함께 엄중하게 시행할 때 국가가 안정적으로 통치될 수 있다고 하였다.
- ㄹ. 중국 고대 법가(法家) 사상가들은 권력의 분산과 이에치국(以禮治國)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법을 중시하였다.
- ㅁ. 맹자(孟子)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인(仁)의 단(端),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의(義)의 단(端), 사양(辭讓)하는 마음을 예(禮)의 단(端), 옳고 그르게 여기는 마음을 지(智)의 단(端)이라고 하였다.

-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문 7. 법사상가와 그의 주장이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마키아벨리(N. Machiavelli) - 군주는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때로는 비도덕적인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 ② 보댕(J. Bodin) - 주권이란 국가의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권력이다.
- ③ 루터(M. Luther) - 법의 목적은 악한 사람을 바로잡아서 현세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 ④ 그로티우스(H. Grotius) -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과 정의롭지 않은 전쟁으로 구분된다.
- ⑤ 칼뱅(J. Calvin) - 민주주의는 신(神)의 법에 따른 제도이며, 현세의 질서를 위한 최상의 체제이다.

문 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홉스(T. Hobbes)는 진리가 아니라 권위가 법을 만든다고 보았다.
- ② 홉스(T. Hobbes)는 군주가 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아 저항권을 부정하였다.
- ③ 로크(J. Locke)는 입법권이 아니라 집행권이 최고의 권력이라고 보았다.
- ④ 루소(J. J. Rousseau)는 엘리트주의 대의제도를 비판하였다.
- ⑤ 루소(J. J. Rousseau)는 정부가 주권자에 종속된다고 보았다.

문 9. 칸트(I. Kant)가 주장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인간의 존엄은 인격의 자율성, 즉 자기입법에 기초한다.
- ② 법질서는 구성원 각자가 목적적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지향해야 한다.
- ③ 국가는 온정주의적으로 구성원의 이익이나 행복을 보살펴야 한다.
- ④ 국가를 해체하더라도 감옥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형수는 처단되어야 한다.
- ⑤ 국가권력의 불공정한 행사나 남용에 대해 국민의 폭력적 저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0. 헤겔(G. W. F. Hegel)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절대적 실체인 국가를 구속하는 국제법은 있을 수 없고 대외적인 국가법이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 ② 국가 간 전쟁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연맹에 의한 영구평화론을 제시하였다.
- ③ 객관정신은 법, 도덕, 윤리의 3단계로 발전한다고 설명하였다.
- ④ 소유권의 근거를 상호 인정에서 찾았다.
- ⑤ 범죄는 형벌이라는 불법의 부정을 통하여 회복되므로, 형벌의 목적은 응보라고 보았다.

문 11. 벤담(J. Bentham)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보는 견해에 반대하였다.
- ② 선례구속의 원칙이 핵심인 보통법(common law)은 법관의 자의를 확대한다고 비판하였다.
- ③ 의회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을 역설하였다.
- ④ 형벌의 목적은 악행을 저지함으로써 공동체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⑤ 권리는 실정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문 12. 예링(R. v. Jhering)의 법사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의 목적은 입법자가 법제정 시 고려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생활 자체에 내재하는 목적인다고 보았다.
- ②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라고 보았다.
- ③ 강제력은 법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④ 권리의 본질에 대하여 이익설을 주장하였다.
- ⑤ 이익법학과 평가법학으로 계승·발전되었다.

문 13. 다음 내용을 주장한 법사상가는?

- 제1차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법으로서 '사회단체의 내부질서'
- 사회현실에 따라 생동하는 '살아있는 법'
- 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법을 탐구하는 방법

- ① 푸흐타(G. F. Puchta) ② 피히테(J. G. Fichte)
- ③ 슈미트(C. Schmitt) ④ 피니스(J. Finnis)
- ⑤ 에를리히(E. Ehrlich)

문 14. 다음은 켈젠(H. Kelsen)의 법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은 입법과 관습에 의해 창설되고 대체로 실효적인 강제 질서의 효력근거에 대한 실증주의적 법이론의 대답이다. 만약 사람들이 실정법을 효력 있는 것으로 고찰한다면, 다시 말해서 만약 실정법이 명하는 대로 행위하여야 한다고 상정한다면, 실정법 질서를 창설한 최초의 헌법이 명하는 대로 행위하여야 한다는 규범을 전제한다. 이 규범은 법권위의 의지적 행위에 의해 제정된 실정적인 규범이 아니라, 법률적 사고에서 전제된 규범이다.

- ① 법이념 ② 헌법규범 ③ 승인규범
④ 근본규범 ⑤ 실천이성 규범

문 15. 미국 법현실주의자 르웰린(K. Llewellyn)이 주장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사법은 법창조과정이다.
② 법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③ 법규칙은 주로 판결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된다.
④ 기하학처럼 법은 자족적이고 통일적인 체계이다.
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법이 적합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 16. 법개념에 관하여 법사상가와 그의 주장이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칸트(I. Kant) - 법은 한 사람의 자의가 자유의 보편원칙에 따라 타인의 자의와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의 총체이다.
② 사비니(F. C. v. Savigny) - 법은 언어처럼 민족정신의 표현이다.
③ 슈탐플러(R. Stammler) - 법은 불가침의 자주적, 결합적 의욕이다.
④ 옐리네크(G. Jellinek) - 법은 인간 상호 간의 외적 행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들 중 실력에 의하여 그 구속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⑤ 드워킨(R. Dworkin) - 법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문 17. 정의에 관하여 사상가와 그의 주장이 옳게 연결된 것은?

ㄱ. 롤스(J. Rawls) ㄴ. 노직(R. Nozick) ㄷ. 왈저(M. Walzer)

- A.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 불평등은 i)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아래 모든 이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어야 하며, ii) 최소수혜자 계층에 속하는 사회구성원의 이익이 최대가 되어야 한다.
B.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권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근로소득세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C. 각 재화는 그것이 해당 영역에서 갖는 사회적 의미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 | | A | B | C |
|---|---|---|---|
| ① | ㄱ | ㄴ | ㄷ |
| ② | ㄴ | ㄱ | ㄷ |
| ③ | ㄴ | ㄷ | ㄱ |
| ④ | ㄷ | ㄱ | ㄴ |
| ⑤ | ㄷ | ㄴ | ㄱ |

문 18. 다음 내용을 주장한 법사상은?

법은 생산관계를 토대로 하는 상부구조에 속한다. 지배계급의 법이데올로기는 법제도와 법학교육 등 헤게모니 장치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정당화된다.

- ① 자유주의 법사상 ② 사회주의 법사상
③ 공동체주의 법사상 ④ 실용주의 법사상
⑤ 분석법학

문 19. 법철학자와 그의 주장이 옳게 연결된 것은?

ㄱ. 하트(H. L. A. Hart) ㄴ. 라즈(J. Raz)
ㄷ. 풀러(L. Fuller) ㄹ. 라드브루흐(G. Radbruch)
ㅁ. 홈즈(O. W. Holmes, Jr.)

- A. 법질서가 존속하려면 '자연법의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B. 법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면, 세속적인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고 법적 효과를 예측하려는 악인(惡人)의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아야 한다.
C. 어떤 규범이 법인지 아닌지는 도덕이 아니라 사회적 사실에 따라서 확인될 문제이다.
D. 법률을 통해 맹목적인 중오를 표현하려는 시도가 행해질 때 법의 내재적 도덕성은 침해된다.
E. 정의의 핵심인 평등을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법률은 단순히 불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성질 자체를 가지지 못한다.

- | | A | B | C | D | E |
|---|---|---|---|---|---|
| ① | ㄱ | ㄴ | ㄷ | ㄷ | ㅁ |
| ② | ㄱ | ㄷ | ㄴ | ㅁ | ㄷ |
| ③ | ㄱ | ㅁ | ㄴ | ㄷ | ㄷ |
| ④ | ㄴ | ㄷ | ㅁ | ㄷ | ㄱ |
| ⑤ | ㄴ | ㅁ | ㄷ | ㄱ | ㄷ |

문 20. 법철학 사조와 그 입장이 옳게 연결된 것은?

ㄱ. 일반법학 ㄴ. 역사법학 ㄷ. 논증이론
ㄹ. 체계이론 ㅁ. 여성주의 법이론

- A.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것 등 입법 없이 스스로 형성되는 것도 진정한 법원(法源)으로 본다.
B. 개별 법규들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법개념들과 원리들을 추출하여 법질서의 통일성을 추구한다.
C. 진리에 대한 실체적 진리대응설을 비판하고 절차주의적 합의설에 기반한 법이론을 제시한다.
D. 법의 기능은 사회의 복잡성을 줄이는 데 있다고 본다.
E.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관점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비판한다.

- | | A | B | C | D | E |
|---|---|---|---|---|---|
| ① | ㄱ | ㄴ | ㄷ | ㄷ | ㅁ |
| ② | ㄴ | ㄱ | ㄷ | ㄷ | ㅁ |
| ③ | ㄴ | ㄷ | ㄷ | ㄱ | ㅁ |
| ④ | ㄷ | ㄴ | ㄱ | ㅁ | ㄷ |
| ⑤ | ㄷ | ㄷ | ㄴ | ㄱ | ㅁ |

문 21. 샌델(M. Sandel)의 정의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유주의 정의론을 비판한다.
- ② 무연고적 인간관을 비판한다.
- ③ 공리주의 정의론을 비판한다.
- ④ 가치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을 지지한다.
- ⑤ 시민의 덕목을 함양할 법정책을 지지한다.

문 22. 다음 판결문과 입장이 유사한 법철학적 진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형법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개인적 법익 보호에 제1차적 목표가 있는 것이며, 사회의 윤리도덕을 강제하거나 고양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국민의 도덕적 개선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권리도 의무도 아니며, 윤리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를 전부 형벌로써 다스린다면 형법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어 국가는 윤리도덕의 보호를 빙자해서 필요 이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 ㄱ. 문명화된 공동체 구성원에게 그의 의지에 반하여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때뿐이다.
- ㄴ. 도덕 위반은 그로 인해 손해를 입는 사람이 없더라도 사회 전체에 대한 범죄이므로 처벌되어야 한다.
- ㄷ. 우상숭배가 종교적 죄가 된다고 해서 통치자에 의해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ㄹ. 시민의 사생활에 개입하거나,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이상으로 특정한 유형의 행위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법의 기능이 아니다.

- ① ㄴ, ㄷ ② ㄷ, ㄹ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3. 다음 법적 추론 양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살인자는 형법 제00조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
- (2) 甲은 살인자이다.
- (3) 그러므로 甲은 형법 제00조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

- ① “p라면, q이다.”라는 조건적 삼단논법의 일종이다.
- ② 대전제인 법률에 소전제인 사실관계를 포섭하는 추론이다.
- ③ 법률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심사하는 추론이다.
- ④ 로브레브스키(J. Wróblewski)가 말하는 내적 정당화(internal justification) 과정에 해당한다.
- ⑤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자들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형식적 정의를 확보하고자 한다.

문 24. 법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두 개의 사례 중 한 사례에 법률이 특정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면, 법률이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은 다른 사례에도 그와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유추이다.
- ② 한 자전거를 두 사람이 함께 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면, 한 자전거를 세 사람이 함께 타는 것은 당연히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물론해석의 예이다.

- ③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규범이 있을 때,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반대해석의 예이다.
- ④ 「형법」 제251조 ‘직계존속이…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에서, 직계존속의 범위에 생모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확대해석의 예이다.
- 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소’는 통상 행정구역상의 지번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유언자가 거주하는 동(洞)만을 기재한 경우 이 조항에 규정된 주소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예이다.

문 25. 다음 ()에 들어갈 말이 옳게 연결된 것은?

「형법」 제170조 제2항은 명백히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을 뿐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고는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말의 보통 표현방법으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은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한꺼번에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형법법규의 해석은 (A)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B)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C) 또는 새로운 입법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중요한 내용인 (D) 금지 원칙상 쉽게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 | A | B | C | D |
|-----------|---|---------------|---|------------|
| ① 역사적 해석 | - | 역사적 해석 | - | 법창조 - 유추해석 |
| ② 문언해석 | - | 문언상 해석 가능한 의미 | - | 법창조 - 유추해석 |
| ③ 문언해석 | - | 체계적 해석 | - | 법창조 - 반대해석 |
| ④ 체계적 해석 | - | 체계적 해석 | - | 법형성 - 축소해석 |
| ⑤ 목적론적 해석 | - | 법익 중심적 해석 | - | 법형성 - 축소해석 |

지적재산권법

문 1. 「저작권법」과 「특허법」의 정의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 ② ‘복제’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고정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④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서의 ‘실시’란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 2.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용실시권의 간접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에 간접침해가 인정된다.
- ③ 간접침해란 특허권의 직접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침해의 개연성이 높아 특허침해로 의제되는 예비적인 행위를 말한다.
- ④ 특허발명의 대상인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 시에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고 있었고 특허권자가 그러한 부품을 따로 제조, 판매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의 간접침해에서의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된다.
- ⑤ 특허권의 간접침해의 경우 「특허법」상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문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허청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② 2명 이상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 ③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 ⑤ 민법상 행위능력이 있어야 발명자로 될 수 있다.

문 4.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권의 이전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 ③ 공유인 특허권의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지분에 관계없이 그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 ④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문 5. 「특허법」상 선출원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고,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에 그 분할출원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 ④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 ⑤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 주장된 특허출원은 선출원의 판단에 있어서 특정 당사국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을 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문 6. 「상표법」상 단체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ㄱ. 단체표장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 ㄴ. 단체표장에 관하여는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ㄷ. 단체표장권은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 ㄹ.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문 7.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생물에 대한 발명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
- ② 암수결합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의 발명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
- ③ 특정 물질의 새로운 성질을 발견한 경우는 발명이 아니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방법에 관한 발명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동식물품종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 8. 저작권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시학원이 모의시험을 출제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전송할 수 있다.
- ②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다.
- ④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 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문 9.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群)의 고안에 대하여는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 ④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 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문 10.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② 특허권자가 자기의 특허권을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과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다.
- ③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른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다른 당사자는 반드시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적인 제재인 침해죄는 과실범도 처벌이 가능하다.

문 11. 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② 청구범위의 해석 시 청구항별로 개별적으로 보호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설명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가 없다.
- ④ 청구범위에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권자가 그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문 12. 저작권재산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②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권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③ 저작권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 1월 1일 오전 0시부터 기산한다.
- ④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 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7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문 13. 「상표법」상 상표등록 취소심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
- ② 업무와 분리하여 업무표장권만 양도한 경우
- ③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 ④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 ⑤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문 14. 「특허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전용실시권은 지역, 기간의 제한을 정할 수 없다.
- ② 전용실시권은 실시허락계약에 의해서만 설정될 수 있다.
- ③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 ④ 특허출원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을 실시하는 자는 그 발명의 범위에서 전용실시권을 가진다.
- ⑤ 통상실시권의 이전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문 15. 저작권접권 중 실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는 실연자이다.
- ② 저작물이 아닌 것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는 실연자가 아니다.
- ③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는 실연자에 포함된다.
- ④ 실연자의 권리는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⑤ 실연자의 인격권에는 공표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문 16.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후 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상표등록출원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원인 또는 제3자의 심사청구가 있어야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절차가 진행된다.
- ③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다른 상표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 ⑤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 17.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②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출처명시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문 18.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이나 법정손해액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②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이다.
- ③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영리목적의 고의 침해가 아닌 한,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저작재산권자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⑤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문 19. 저작인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명표시권은 저작자를 표시하는 것과 관련되지만, 실명 표시로 한정되지 않는다.
- ②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 등을 저작자 이외의 자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 ③ 저작권법은 본질적 내용의 변경이 아닐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이 변경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④ 일신전속권이므로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은 보호되지 않는다.
- 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의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문 20. 「저작권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ㄴ. 저작자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
 ㄷ.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ㄹ.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내재된 사상이나 감정 자체가 창작성을 갖추면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1.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 ②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이를 포기할 수 있다.
- ③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 ④ 상표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 ⑤ 상표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문 22. 「특허법」과 「상표법」이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심판제도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특허(또는 상표등록) 무효심판
 ㄴ.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ㄷ. 권리범위 확인심판
 ㄹ.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ㅁ.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①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ㄷ, ㄹ, ㅁ

문 23.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비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법」의 경우와는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일부심사 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②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기산점에는 차이가 없다.
 ③ 「특허법」의 경우와는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출원을 공개한다.
 ④ 디자인권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⑤ 「디자인보호법」에는 정정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 24.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ㄷ.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으며, 인용되는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ㄹ.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ㅁ.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미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 25. 「상표법」상 상표와 인접한 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상표와 서비스표 등록출원은 상호 간 출원의 변경이 가능하다.
 ㄴ. 업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ㄷ.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은 상품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ㄹ.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조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이 포함된다.
 ② ‘세법’에는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등이 포함된다.
 ③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연대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⑤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함)가 있는 자를 말한다.

문 2.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 수령인이 송달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② 교부에 의해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 다른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교부 또는 우편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⑤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문 3.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법인 아닌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
 ②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④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법인으로 본다.
 ⑤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영리법인으로 본다.

문 4.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나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ㄷ.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추계에 의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
 ㄹ.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ㄹ ⑤ ㄷ, ㄹ

문 5.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에 관련된 법정기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의 경우 징수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④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문 6.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ㄱ.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ㄴ.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ㄷ.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7.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ㄴ.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ㄷ. 증권거래세 -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ㄹ.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ㅁ ③ ㄱ,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ㄹ, ㅁ

문 8.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자가 국내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제척기간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제척기간으로 한다.
 ③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을 제척기간으로 한다.
 ④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제척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문 9.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ㄱ.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채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ㄷ.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채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문 10.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경정 등의 청구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결정 또는 경정청구를 한 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본다.

문 1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②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③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④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 전부를 감면한다.
- 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문 12.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②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③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
- ④ 「소득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은 비거주자로 본다.

문 13. 「국세기본법」상 불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③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후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이 중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

문 14.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②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인 공동사업자는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③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신탁의 수익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⑤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문 15. 「소득세법」상 국내에서 거주자가 지급받는 과세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
- ②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③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 ④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그 위약금
- ⑤ 근로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문 16. 소득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 ③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④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당소득은 부부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 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문 17.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 ① 1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
- ② 1인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만 있는 자
- ③ 변호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
- ④ 분리과세이자소득만 있는 자
- ⑤ 1인으로부터 받은 공적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문 18. 배당세액공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법인 단계의 법인세 과세와 그 구성원 단계의 소득세 과세에 따른 경제적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법인의 소득 중 배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방식이다.
- ③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을 그 구성원 단계의 소득세 산정에서 모두 공제하는 방식이다.
- ④ 구성원이 지급받은 배당금액을 그 구성원 단계에서 소득공제하는 방식이다.
- 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한 귀속법인세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문 19.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 ③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④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
- 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문 20.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 ② 외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 ③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 ④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말한다.
- ⑤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포함한다.

문 2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 ② 의제배당
- ③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④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⑤ 내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

문 22. 「부가가치세법」상 국경세 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②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③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다.
- ⑤ 재화의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문 23.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시가로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가정함)
- ③ 환급받을 법인세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 ④ 감자차익
- ⑤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문 24.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소득세법령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② 운수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
-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④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세금계산서에 적히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 ⑤ 소득세법령상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

문 25.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 ④ 어음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⑤ 국가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